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효율적 운영방안

류 전 철*

I. 논의의 전제

우리는 2005년 4월 21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가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서, 실시여부에 대한 부정적 관점보다는 어찌든 시행될 거라는 관점으로 기울어짐을 확연히 실감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려는 많은 대학들은 인가기준에 대한 관심과 자기대학의 유치를 위한 전략적 분석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유치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인식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자기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되기만 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을 대학이 어디에 있겠는가?

만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인가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일정한 자원(지금까지 제시된 최소교수인원 20명, 법학도서관을 포함한 물적시설, 적절한 교육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부합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델을 만들어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 또한 당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지방사립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100명 정도의 입학정원에 지금까지 제시된 인적, 물적 기준을 전제로 한 다음 시뮬레이션을 위한 교과과정, 재정운영, 그리고 특성화 및 졸업 후의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진로 등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하나의 효율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델을 창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

1. 교육목표의 설정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에 따라 상이한 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법학전문대학원전문가협의회(이하 전문가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일반적 성격과 교육목표로서 「다양한 전공의 학부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원수준에서 21세기의 국제적 경쟁을 담당할 수 있고, 국내적·지역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양과 질 양면에서 높은 수준의 자질과 지식을 갖춘, 공익적 사법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둔다」고 하였다.

사개추의 공청회에서 발제자인 문재완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의 자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집중 교육시켜 사회에 배출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됨. 법학전문대학원은 예비법조인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기본을 확립하여 주는 교육기관으로, 법조인 양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이라고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상술한 두 개의 인용 글은 다른 뉘앙스를 주고 있다. 전자는 '전문'법률가의 양성에, 후자는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으로서 능력을 위한 '기본'확립에 두고 있다. 전자는 理想型이라면, 후자는 現實型이라고 보여진다.

전문법률가 양성에서 '전문'이란 법학교육의 전문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른 사회 각 분야별 전문화를 의미한다고 이해한다면, 3년

의 교육기간을 통해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은 희망사항으로 보여진다. 주어진 3년이라는 교육연한과 90학점 이상의 이수 더군다나 법학전공자가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교육목표의 설정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대학의 법학교육이 사법시험제도로 인한 파행적 운영으로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이지, 현재의 대학의 법학교육능력으로도 법조인 양성의 기본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전문적 법률가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도외시킬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두 가지 현실을 제도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과정은 법률전문가로 성장할 예비법조인의 기본적 능력을 교육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되는 박사과정을 통해서 전문적 법률가를 양성하는 방안이다.

다른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을 트랙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즉 1학년 과정을 공통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2학년과정에 몇 개의 전문분야를 설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선택필수를 배치하여,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향후 나가고자하는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 향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과 기회제공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본다.

3년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법률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이 확립된 예비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그 교육목표를 둔다.

- * ‘기본’의 의미는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법률가로서 필요한 기술(skill) 그리고 확고한 직업윤리를 말한다.

2. 교과과정

현재 논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패는 교육내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내용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교육방법도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기본이 확립된 예비법조인의 양성에 둔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양질의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한 기본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법학교육이 이론중심이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을 지나치게 실무중심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론과 실무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이론적인 것과 이론적 배경없이 관행화된 실무가 문제일 것이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은 실제로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법률수요를 충족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므로 실무(實務)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실무교육은 기본적인 법이론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적분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에서는 기본교과과정과 전문교과과정을 융합하는 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양질의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한 기본교과과정

졸업이수학점을 90학점 이상으로 본다면 학생은 한 학기에 최소 1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점 구성을 3학점과 2학점 단위로 구성한다면 학생들은 한 학기에 5과목 내지 6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정법 교과내용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성패가 제도적 도입이나 교과과정 및 교수법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공급자의 변화를 교육수요자가 따라올 수 없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준비한 대로 법학전문대학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아마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과중한 부담에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전문가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목은 자율에 맡기는 안을 제시했고, 사개추의 공청회에서는 실정법에 대한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일임하여, 개별 대학원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1) 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교과과정

1999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제시한 1안

1-2학기(필수) : 공법(10), 민사법(16), 형사법(6), 법률문장론(2), 법조윤리(2)

- 총 36학점 이상

3-6학기(필수) : 모의재판, 실습, 졸업논문

(선택) : 60학점 이상

법률기본과목의 필수를 최소화 할 경우 선택과목 개설의 폭이 넓어 다양한 전문 분야관련 과목을 교과과정에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많은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기준을 염두에 두고 많은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전문화된 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대체로 필수과목을 최소화하는 교과과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사고능력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이 될 우려가 있다.

2) 필수과목을 강화하고 선택의 폭을 줄이는 교과과정

1999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제시한 2안

1-3학기(필수) : 헌법(8), 민사법(16), 형사법(6), 법률문장론(2), 법조윤리(2),

국제법(3), 행정법(3), 상법(3), 사회법(3), 기초법(3) - 총 49학점 이상

(사회법은 노동법과 경제법 중 택일 : 기초법은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중 택일)

4-6학기(필수) : 모의재판, 실습, 졸업논문

(선택) : 47학점 이상

법률기본과목을 강화하여 필수이수학점을 늘리면 당연히 선택과목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실무교육을 강조한 법학전문대학원설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또한 기존의 법과대학의 교육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지적도 있을 것이다.

3) 사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명백하다.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과 그러한 법적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사고능력 그리고 법조인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실력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과목을 필수로 하여 어느 정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법과대학의 교과과정을 염두에 두고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별반 소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조합을 통합 교과과정 예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상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과목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지식을 융합·압축하여 공법기본과목, 민사기본과목, 형사기본과목, 기초법과목을 가능한 최소학점으로 구성하여 기본교과과정 모델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기본교과과정은 1-2학기에 집중 배치하고 경우에 따라서 1-3학기 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

(2) 전문성을 가미한 교과과정

기본이 확립된 예비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기본교과과정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역할이 충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예비법조인을 기다리는 사회의 법률시장의 수요는 다양하게 분화심화되고 있으며,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활동영역은 확대되어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과정에서 법률시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교육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최소한 다양화·전문화·국제화되어가는 법률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기회’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법조인에게 졸업 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는 교과과정은 기본교과과정을 이수를 전제로 트랙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몇 개의 트

랙으로 구성할 것인지, 전문분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결정할 문제이다. 전문분야의 구성은 예를 들어 일반생활법무, 기업법무, 공익법무, 국제법무, 보건의료법무, 정보통신관련법무 등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트랙제를 통한 전문성을 가미한 교과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 트랙 안에서 과목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기본교과과정과 전문교과과정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 기본 모델 예

3-6학기	전문교과과정	일반생활법무	공익법무	기업법무	국제법무
1-3학기	기본교과과정	민사기본과목, 공법기본과목, 형사기본과목, 기초법과목 등 법률기초교육과 법정보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등 실무기초교육			

* 엑스틴션, 로어링, 법률봉사 등은 전문교과과정의 트랙 안에서 적절하게 4-5학기에 교과트랙과 관련된 실무연습을 하도록 함.

3. 교육방법

교육방법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고유권한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사법시험이라는 굴레에 얽매어있던 대학의 법학교육은 강의중심의 교육방법이 절대적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그러한 교육방법이 적합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아니라고 대답한다. 혹자는 미국의 Law School에서 하는 교육방법인 소크라테스식 교수방법을 추천하거나, 토론식 강의, 문제풀이식 강의 등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 기본교과과정에서 기본적 법률지식을 압축적으로 강의하기 위해서는 교수방법은 기존의 방식으로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우고 난 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배우게 할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맞는 교재의 연구개발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준비되어야 한다.

교육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시점에선 무형적인 형태로 평가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II.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이 어느 정도의 재정규모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입학정원을 150명을 넘지 않는다는 정도의 제안이 있는 정도이다. 그렇다고 인가될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이 150명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운영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입학정원 100명 정도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상정하고 재정운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편의상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육원가를 참고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영을 살펴보기로 한다.¹⁾ 여기서는 2008년 개교 이전의 초기투자비용은 제외하고 또한 공간원가나 대학본부 등의 교육지원부서원가를 제외하고 순수 운영비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 대 교수 비율과 입학정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평균 100명으로 잡을 때 1:12의 교원비율을 전제하면 교수의 수는 최소 25명이 되나, 실제로 운영과정에는 30인 정도가 될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출을 책정해보았는데, 여기에는 초기 투자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1) 조선대학교에서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원가분석 방법과는 다르게 강의직접원가, 연구원가(교외, 교내), 학과(부)교육활동원가, 단대운영원가, 교육지원부서원가, 공간원가 등 계층별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가분류는 학생 등록금 차등 납부제도를 실시할 경우 학생 교육과의 직접 관련성 정도에 따라 원가계층별로 학생 부담률을 차등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지출 예

항 목	내 역	금 액
강의직접원가	학생 교육에 투자된 인건비 -교수 급여 70,000,000원×30명=2,100,000,000원 -외래강사 급여 10,000,000원×10명= 100,000,000원 -실습비: 20,000,000원	2,220,000,000
교비연구원가	외부 연구지원금 수입을 제외한 원가	10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활동원가	-정식직원 인건비 50,000,000원×3명=150,000,000원 -계약직 인건비 24,000,000원×5명=120,000,000원 -조교 인건비: 18,000,000원×10명= 180,000,000원 -관리운영비, 학생경비, 비품, 보직수당: 150,000,000원	600,000,000
교육지원부서원가	법학전문도서관, 전문법연구소 운영관련	200,000,000
계		3,120,000,000

- * 강의 직접원가: 교수, 외래강사에게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와 실습관련경비
- *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및 교육활동원가: 직원 인건비, 조교인건비, 관리운영비, 학생경비, 비품 및 자산의 기회비용, 보직수당
- * 교육지원부서 원가: 법학전용도서관, 전문법연구소 운영원가
- * 공간원가: 법학전문대학원, 타 단과대학, 대학원, 본부, 부속기관이 사용하는 건물·토지 공간원가
- * 교비연구원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교내 연구비

이렇게 계산하면 1년 등록금은 약10,400,000원(총교육원가 3,120,000,000원/ 학생수 300명)이 된다.²⁾

재정운동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면 지출은 31억 2천만원 정도이고, 따라서 학생들의 등록금은 1천40만원정도라는 수치가 나온다. 문제는 장학금의 재원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어 있다. 장학금에 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초기에는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

2) 국내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대교수비율 12:1, 입학정원 100명, 교수 수 25명으로 할 경우 교수 평균연봉을 7,000만원으로 잡아볼 경우 로스쿨은 교수에 대한 임금으로 적어도 17억 5천 만원을 지출해야 하고, 그 밖의 운영비로 10억 정도를 예상하면 연간 30억 정도의 경비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밖에 장학제도 운영의 필요성 등도 고려하게 되면, 등록금을 연 1,500만원 정도로 해서 45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초기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수준은 일본이 초기 국립대학원은 78만엔선, 사립대학원은 200만엔 선 전후로 발표했던 것과 비슷하고, 현행 대학원 등록금의 2.5배 남짓한 액수이다. [임상혁, “중소규모 법과대학의 로스쿨 도입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Vol.26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279-280면].

하여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일반 학부나 대학원보다 훨씬 수혜의 폭이 큰 장학제도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그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는 교내장학금(전액면제)으로 입학정원의 20%정도를 책정한다면, 매년 6억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학기당 등록금을 600만원 정도로 책정하여 일년에 12,000,000원 정도가 학생들이 부담할 교육비용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영은 교육여건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서 모든 출혈을 감수하겠지만, 일단 인가된 대학들은 가능한 손실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지출을 감축할 것이고, 그 감축의 대상은 인건비와 연구관련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대학에 인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문제

특성화 논의는 두 가지 배경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하나는 공적인 차원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의 법률적 수요에 대하여 전체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적절한 공급창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즉 법학전문대학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특성화 전략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 이상으로 어느 한 분야에 중복 투자되거나 필요한 분야가 방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차원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생존 내지는 경쟁력 강화의 차원이다. 만일 아주 소수의 법학전문대학원만이 인가되고,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간 경쟁이 별로 필요 없게 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다소라도 경쟁이 필요한 경우라면 성공적인 특성화 전략이 학교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과정에서부터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려는 대학들은 저마다 어느 분야를 특성화할 것인지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른 관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사개추의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화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등이 그것이다. 아마도 회의적인 시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의 교육기간에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예비법조인을 양성하기에도 벅찬데 거기다 특성화까지 가미한다면 기형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한 가지는 ‘전문화되고 국제화된 법률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빠뜨리고는 법학전문대학원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다. 현행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제가 현대사회의 다양한 전문적 법률수요에 대응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특히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와 법무시장의 개방을 앞두고는 국제적 법률문제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반성이 법학전문대학원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는 일반교육과정에서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법연구소와 박사과정을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다만 3년의 교육기간에 전문화되고 국제화된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2년 정도의 박사과정의 교육기간이 더 요구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느 법학전문대학원이 중국통상법으로 특성화하려고 한다면, 기업법무와 국제법무의 전문교과과정을 선이수(先履修)하게 한 후, 박사과정의 교과과정을 집중하여 중국통상전문가를 배출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특성화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을 기존법조인들이 재교육과정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예비법조인들에게도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특화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예

박사과정	특성화전문과정			중국통상법특화교육	
3-6학기	전문교과과정	일반생활법무	공익법무	기업법무	국제법무
1-3학기	기본교과과정	법률기초과목과 실무기초교육			

V.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졸업후 진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직업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법조지역에 진출하는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개업한 변호사나 판사, 검사의 진로만이 아니라, 사회의 법조 수요가 있는 곳으로 다양하게 진로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합격자들이 진출하는 영역(기업체, 공공기관, 공익법인)에 보다 많은 수의 예비법조인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현실적으로는 변호사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졸업자의 사회진출을 위한 자문기구를 두어 개인 변호사사무실의 운영에 관한 조언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법무나 국제법무영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졸업생들을 위해서 법조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연계를 유지·강화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어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복합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략의 윤곽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대략의 윤곽만을 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리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입학정원과 인가대학의 결정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

고 있는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은 많은 사람의 관심밖에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인가의 기준과 인가결정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도입하고자하는 취지와 그러한 취지에 맞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질적 교과과정을 만들고, 그러한 교과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한 개발 등을 관심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버리게 되었다. 이는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어느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법학대학원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는 과히 의문이 아니라할 수 없다.

현재의 각 법과대학들이 인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실있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는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2008년 개교 이전까지 인가된 대학들은 효율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을 위해 전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대안으로서 물적, 인적 인가요건보다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대한 각 대학의 방안과 그 구체성을 인가기준의 중요한 척도로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인가를 희망하는 대학들이 경쟁을 하여 보다 우수한 운영방안을 제시한 대학에 가인가를 하여주고, 물적시설과 인적요건들은 실사를 통해서 정식인가를 하는 것이 외형만 가지고 경쟁하도록 하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